

답 변 서

수용자의 처우개선과 권리 확보를 위해 활동하시는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단체는 총 8개의 개괄식 질의 문항이나 좀 더 수월한 이해를 돕고자 서술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바랍니다.

통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은 검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신인이 언론사라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 수용자들이 지인인 일반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과 달리, 언론사에 서신을 보내면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 하는 등으로 기사자료를 제공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재판 작용 및 교정행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수용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교도소 직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소에 수용중인 수형자 김00(수용번호 000번)은 2013.09.05. 광주 교도소에서 이입된 자로, 광주교도소 수용시부터 교정심리 특이자로 계호 업무지침 제15조 8호 ‘정신병적 우울증세를 보이거나 신병을 비판하는 사람’에 해당되어 일일 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되어 왔으며,

평소 본인의 처우에 대해 법무부장관 청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수회하였으나 대부분이 기각 처리되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일반 수용자와는 다른 수용생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3.09.16. 광주 MBC 방송국과 해남 KBS 방송국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신을 제출한 바, 서신 담당 문00은 수용자 김00의 그간의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 종합적인 판단하에 형집행법 43조 4항 3호에 따라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었고 특히 수신처가 언론사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열을 실시하였으며,

서신 내용 중 “광주교도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및 법무부장관 청원 등 수용자 권리구제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직원들의 직무유기, 근무태만, 직권 남용 등에 대해 상부기관에 신고하려고 하는 것도 막은 후 이를 빌미로 수용자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의 재량으로 직무방해나 지시불이행으로 조사·징벌방에 가두고 일반거실에 있을 땐 수시로 거실검사를 실시하여

스티커 발부나 조사수용을 시켜 억울하다는 내용과 교도소나 구치소에서는 사회에서 보내는 서신을 받아볼 수 없고 마약사범들은 운동시간을 이용하여 일반 수형자에게 접근해 마약 투여를 권유하여 마약거래의 판로를 형성하며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형집행법 43조 5항 4호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당일 검열한 사실과 발송 불허된 경위 및 사유에 대해 상담을 통해 설명 및 고지하였으며 이후 9월 30일과 11월 11일 추가 상담을 통해 법적 근거와 사유에 대해 설명한 바, 당시 이에 수긍하였고 본인 스스로도 보내지 않을 것 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 등에 서면통보에 관한 규정은 없어 앞으로도 별도로 서면 통보 계획은 없으며, 검열 및 불허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상담을 통해 충분히 설명 조치하고, 수용기록부상 상담기록부에 처리되었으나, 이는 수용자 개인 신상 및 수용관리상 비공개 정보로 분류되어 본인을 비롯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수용자 김00이 당시 제출한 서신은 총 6통으로 언론사를 수신인으로 한 2통을 제외한 나머지 4통은 검열 없이 발송되었으며, 기타 서신에 대해서는 검열을 시행하지 않았고, 개인서신표와 정보사항처리부는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으나 이는 교도관의 직무와 개인의 정보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비공개 대상문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집행법에 서신검열대상자 지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운용하지 않으며, 수용자 김00은 관심수용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타 언론사 발송 서신검열과 관련하여서는 대전지방법원 판례(사건 2012나100010 손해비상(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남교도소 사회복귀과(061-530-9435, 서신담당 문0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6일

해 남 교 도 소